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오늘

김진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의의

한국의 분단과 장기적인 군사독재체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한국에는 왜 자주적인 반반한 노조 하나 없는지, 취업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로 몰려나와 농업외의 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 종사 노동자가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는 되는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 없는지 의아해 하였다.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화가 막대한 외국자본을 빌려다가 추진하게 되자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대공장이 서고 막대한 금융 세급혜택을 베풀어 재벌을 키워갈 때 한편의 남성 대규모 노동자를 통제하느라고 병영(兵營)같은 감시를 하고 임금인상이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하는 노동자가 있어도 '빨갱이'로 몰아 부쳐 구속하고, 또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유신체제로 억압하던 그 엄혹한 시기가 80년대 신군부의 학살작전에 의한 집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바닥에서 노동자들이 차츰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였다. 85년 거대한 재벌그룹 산하의 대우자동차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구로공단의 연대파업으로 기지개를 켜던 노동자들이 87년 6월에는 학생과 시민들과 모두 하나가 되었고,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전국 공단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본질이 드러나고 말았다. 대공장 흐름생산체계, 그리고 빈틈없이 분초의 시간으로 쪼개어 짜여진 노동과정에, 일차이차 삼차로 무수히 연결된 하청생산계열과 수출 선적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빈틈없는 생산의 흐름, 이 생산의 흐름을 잘 기류친 기계로 차질없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병영과도 같은 감시와 통제였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는 구호였고, 반공이데올로기였다. 그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이 일구어 낸 성취는 서구 노동운동사로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단계적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투쟁하는 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통일 과정에서 남한의 민주노동운동이 남북한 노동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운동형상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고 바깥에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 정치가 있었다. 그렇게 잘 돌아가던 기계가 어느 틈엔가 작동이 한번 정지되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다. 빨갱이로 몰아 부치는 것만으로는 그 기계가 잘 돌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기계의 정지는 공장 내부의 비인간적 처사에 분노하고 각성된 노동자 의식의 조직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크게는 정치장치에 틈이 생겼던 것이다. 그 해 87년 초 박종철 군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살해당하고 또 더하여 고문치사 은폐조작이 들끓는 사건에 의하여 깨달음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대공장 흐름생산체계가 중심에 놓인 산업구조에서는 임금억제, 강압적인 통제방식만이 아니라 열리고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눈에 띄지 않은 교묘하고 둘러치는 방법까지 모두 시의적절하게 구사해서 그 흐름생산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과제가 자본가앞에 던져졌던 것이다.

87년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은 그 전환국면에서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임금인상을 꽤나 많이 얻어내곤 했지만 조직적인 구심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려 하면 자본의 심없는 여러 통제방식의 실험대상으로 탄압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그리해서 전노협 같은 노조의 운동체가 생기고 모질고 끈질긴 탄압을 받으면서 '전투적'이라는 걸맞지 않은 성격을 규정받기 까지 하면서 싸워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투쟁에 업종을 중심으로 모인 민주노동운동세력이 들어오고 대기업의 대공장노동자들도 들어와서 큰 강줄기를 하나 만들어 민주노총을 건설해냈다. 그리고 그 민주노동운동 세력의 힘을 97년의 실낱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전국 총파업에서 위력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국내외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민주노동운동이 노동조합차원에서는 사실상의 합법성을 획득하였고 97년초의

파업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모든 민민운동세력의 연대를 끌어모아게 함으로써 그 진영의 핵심에 서게 되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위협, 즉 고용불안과 신분위협 같은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투쟁할 때는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고용자들의 연합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로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국외의 사회운동에게도 각성을 주었다. 80년을 기점으로 집어보아도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이나 사회주의 강대국에 있어서 윤키있는 사회운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기인 동시에 후퇴된 보수화 시기였던 것이다. 2차 대전이후 새롭게 세계가 재편되어 갈 때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대체로 계급타협적인 복지국가 체제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그 경제를 복지국가로 유지해 갈만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지 못했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군수산업을 끌도 없이 몰아가기가 어려웠다. 이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너무나 많이 넘치는 장거리 핵탄두미사일을 마냥 만들어 낼 수 없었고, 그것을 사용할 만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건의 결과, 결국 노동자의 복지를 막아내리는 신보수주의정책을 밟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레이건정책, 영국의 대처리즘, 독일의 콜 장기집권, 그리고 그 경쟁에 감당을 못하고 내부의 경색된 구조적 조건과 융합하여 무너지는 소련, 일본의 장기세력 구도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미 타협구도에 걸들여진 선진국 노동운동은 그 난국을 뚫고 나갈 만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침체해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대한민국의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노동자들은 골리앗 싸움과 같은 웅대한 장면을 연출했다. 마침내 군사독재의 주역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고, 노동운동은 비합법의 조건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주목과 연대를 받으면서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 불가사의한 활력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생기로 받아들여게 되었다. 자본의 새로운 살 길을 찾기위해 진행되어 온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소련과 유고와 같이 붕괴한 사회주의권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자본의 세계전일적인 운명에 휘달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망가지고 있는 개발국가를 내지 제3세계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불운을 던지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원시적인 활력을 다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이 일구어 낸 성과는 서구 노동운동사로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문제영역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 '활기'인 것이다. 투쟁하는

'활기'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통일 과정에서 남한의 민주노동운동이 남북한 노동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운동방향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 통일시대-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노동운동

(1)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동운동 진영이 당면한 정세를 바르게 인식, 판단하고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추진해 가는 일은 언제나 항상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예컨대 재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너무 크고 깊은 것이므로, 재벌기업에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일도 시급한 일의 하나일 것이고, 임금인상, 단체협약투쟁도 여러 가지 전술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97년초 파업투쟁에서 깊이 깨닫게 된 바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에 기초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나와야 한다는 판단도 상당히 명철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우선 민주노동운동진영의 헤게모니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그 헤게모니 기반은 우선 조직성원을 확대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과제가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요구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노조를 세우는 일이나 포항제철에 민주노조를 재건하는 일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영세업체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세대문제와 고용형태가 결합돼서 문제를 인식하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2~3년전쯤부터 노동자 집회에 등장하는 문화선전대열에는 록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젊은 노동자들이 환호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과거에 '전태일' 효과는 청계천과복산업에 좁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넓은 의미로 생산직 일반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노동조합은 만들어야 노동자의 인간적 요구가 최소한도라도 주장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70~80년대 민주노동운동은 '전태일'을 운동의 화두로 삼아왔던 것이다. 90년대에 와서는 생산직 뿐만 아니라 도시의 광범한 영역의 유통소비부문의 중소기업체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가 큰 곳에서 나오는 노동자대열은 우선 한 눈에 띄일 정도의 제복을 입고 붉은 띠 두르고 힘찬 노동자 투쟁가를 부르면서 강고한 태세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 대열이 결국 민주노총을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래의 희망을 조직으로 만들어 내고 또 다시 그 조직을 언덕으로 삼아 살아 갈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도 못가고 규모가 큰 생산업체나 사무금융기술분야의 업체에도 취업이 될 것 같지 않은, '길을 아예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도시의 유통서비스업의 하루하루 시간임금에 의탁하며 괜히 답답하여 록음악에 소리라도 질려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심정에서 바라보면, 그 제복입은 강고한 노동대열에 선뜻 동참하기 어렵고 생경하기도 할 것이다. 이들의 문제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바로 잡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도로 치부하고 말면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말 것이다. 국가가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여러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이들에 대한 배려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세업체의 노동자문제나 고용안정 문제차원을 넓혀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사람들을 도시의 퇴폐한 젊은이로 보는 편견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나) 정보화시대의 해게모니문제는 우선 두가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던 시기 대부터 국내 주요 **대중언론매체**들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에 대립되는 계급적 인식을 기반으로 그로부터 민주노동운동에 반대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지침없이,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음해까지 서슴치 않고 지행해 왔다. 이것은 방치하면 할수록 더욱 심했고 비록 그 매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도 견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 97년초 총파업 당시 주요 방송자와 신문사가 기사보도나 해설은 바로 그러한 음해까지 서슴치 않았고 마침 복원의 한 주체사상가가 이곳으로 오게 된 사건을 계기로 공안 광분 분위기로 전화하려고 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주출한 사실에서 보듯이 민주노동운동진영에서 한사라도 소홀함이 없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지배블럭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여타 연대조직을 적절히 동원해 가면서 민주노동운동 진영이 견제를 해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정부는 전자집적회로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을 통합해서

전자카드 한 장으로 만들려고 추진중이다. 98년 10월 전 국민 17세이상을 대상으로 카드발급하기 시작하여 99년 10월에 전국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 주민번호, 당시세대주 성명, 당시세대주 관계, 변동사유, 상태.
2. 개인의료정보 : 혈액형, 기록기관명, 기록일자, 약물과민사항.
3. 인감
4. 개인사항 : 성명, 주민번호, 호주소명, 호주소와의 관계.
5. 인적 사항 1, 2 : 일자, 구분, 사유, 변경전.
6. 이력사항 1, 2 : 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 세대주 주민번호, 당시 세대주 성명, 당시 세대주관계, 변동사유.
7. 병역사항 : 역종, 군별, 군번, 수검일, 전역일, 전역사유, 전역근거, 병가, 주특기, 병과.
8. 세대사항 : 세대주소명, 호주소명, 호주소와의 관계, 세대구성사유, 구성일자.
9. 세대이력 :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0. 운전 면허 : 면허종류, 면허번호, 교부일자, 조건, 발행일자, 적성검사기간, 면허정지취소여부.
11. 의료보험 : 보험자명, 보험기관, 관리번호, 구분, 구분항목, 대진료권, 중진료권, 피보험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피부양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위득일, 자격상실일, 유효기간.
12. 국민연금 : 최초취득일, 최초가입종별구분, 총불입액, 총가입액, 가입자관계, 급여종별, 수급사유일, 유효기간, 수급사유일, 수급증서번호, 카드최종수령일.
13. 가족 1, 2, 3 : 세대주관계, 구분, 성명, 주민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소명, 국외이주신고일자.
14. 검증사항 : 주민등록보관지, 발행기관명, 기관코드, 발급일자.
15. 지문

그리고 전산통신망에는 이 외에도 전화번호와 학력, 혼인관계 사항이 더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로 17세이상 모든 국민 3천4백만여명이 이 전자주민카드를 소

지하게 되면 은행, 병원은 물론 경찰과 모든 행정기관의 운영용 단말기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카드와 연결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전자직접회로카드, 예컨대 사무실 출입카드, 교통카드가 이에 의하여 자료가 집적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크게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산망에 의하여 구성되는 '큰 형' (Big Brother) 체제로 될 것이고, 각 개인은 거기에 연결된 하나의 컴퓨터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가? 노동현장에 출입카드와 같은 기능이 이 전자주민카드와 결합하면 자동으로 전자감시기록장치에 의해 노동자의 움직임이 세세히 검색될 수 있도록 장치될 것이다. 약물과잉반응이나 병역사항이 기록되기 시작하여 그 자료가 사용자 쪽으로 흘러들어 가면 해고와 선별채용의 근거자료로 악용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색된 자료에 의해서 행동의 분초와 노동자의 성품이 판단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은 그러한 전자감시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전자주민카드는 주민, 생활인, 노동자를 비롯한 일꾼들, 민중들, 이 모두의 삶의 현장에 대한 시공간적 권력의 장의 구조가 자연스레 조성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남의 나라에는 없는 주민등록증을 너무 오래 사용하여 그 중독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근래 보급된 각종 전자카드가 노동의 고용기회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그나마 싸워 올린 임금부분을 이 전자카드 때문에 분별없이 소비감각만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닌지 따져 보지도 못하고 그 편리함 같은 것에 매혹되어 걸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운동진영은 이 전자주민카드가 노동자의 고용상태와 생활상태, 소비상태 등등 모든 것에 미칠 효과에 대해 냉철하게 다치하여야만 정보통신의 시대가 몰고 올 전자독재체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계모니도 논할 수 없는 그런 전체주의국가에 살게 되지 않겠는가!

(2) 민주노총의 신문 「노동과 세계」 97년 6월 27일자에 보면 「노동자 동포에 빛났다. 두달동안에 10억달러」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 북한이 몇 년째 큰 물난리를 만나 식량사정이 딱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이 성금을 모아 식량을 도우는데 크게 성의를 내고 있다. 누가 보아도 호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된 사진에 중국 길림성 도문역에서 북한으로 옥수수를 싣고 들어가는 열차앞에 민주노총의 대표자 한 분이 기념촬영한 사진도 나와 있다. 사실 87년이후 한국의 한쪽 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 가는 시기에 또한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눈코 뜰새없이 쳐들어 오는 자본과 권력과의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일문제에 눈을 돌릴 수조차 없었다. 민주노총이 만

신천고 끝에 일어서고 총파업을 통해 합법성마저 얻어내고 나니 북한의 굶주림을 처
 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의 신문에서 뽑은 글자처럼 '노동자 동포애'가 빛나게
 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운동진영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같은 동
 포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노동자를 포함한 민족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남한의 자본도 여러 형태로 투자해 들
 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어
 려움과 경색된 사회주의 때문에 체제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남한 민주노동운동세력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노동자가 겪어 왔던 경험을 되돌아 본다면 경제력이 약한, 다시 말
 해 자본주의 발전이 약한 곳에 외부로부터 발전된 자본이 들어가면 그 자본의 운영이
 어떠한지라는 것 짚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의 노동자가 그러한 조건
 때문에 투쟁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동진영, 나아가
 서는 전체 진보진영이 심각하게 장기적 전략을 세우면서 대처해야 하리라고 본다. 남
 한의 노동자는 북한의 노동자를 잘 모르고 있고, 상당한 기간동안 남한의 자본가는 동
 포기업가의 이미지를 받으며 북한을 자주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또한 미국을 비
 롯한 몇몇 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에너지 해삼을 이루게 될 핵발전소 건설을 위
 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한의 노동자단체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노동자와 모
 어 남북한 노동문제를 토의해 본 일이 없다. 지나온 역사처럼 60년대 장시간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형태를 답습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노동과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 곳에서 살려온 노동관리의 장점, 노동자들의 참여 같은
 문제도 상당히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장기간에 걸
 린 군사독재도 견디면서 싸웠고 독선적이고 인정머리없고 부여만 집착하여 제별로 커
 진 독집자본에 싸워, 이제 겨우 그들 마음대로는 노사관계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는 성장하였다. 자본에게 민족과 동포의 낭만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남
 한 노동계급은 이 민족문제 앞에 50여년간 굳어 온 체제적 차원을 뛰어 넘는 역사적
 인식과 그것에 수반하는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 민주노동조합이 지금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대해 II수준의 노동관계법을 요구하는 것을 언제고 남북한 모
 두를 겨냥해서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대처해 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
 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체가 곧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양한 조건에 놓여
 있는 세계 각국 노동자에게 계속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지력을 만들고 국제적 연대를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